

국별 리포트

# 이탈리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3. 4.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7
IV. 국제신인도	11
V. 종합의견	14



## I. 일반개황

면적	301천 km <sup>2</sup>	G D P (2012년도)	20,115억 달러
인구 (2012년도)	6,097만명	1인당 GDP (2012년도)	32,992 달러
정치체제	공화국(내각책임제)	통화단위	Euro (EUR)
대외정책	EU 역내 우호관계 유지 중점	환율(US기준) (2012년도)	.78

- 이탈리아는 유럽 중남부에 위치한 국가로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음. 국토면적은 한반도의 약 1.5배 수준이고, 인구는 약 6천만 명으로 파악됨.
- 2003~2012년 평균 0%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경제성장이 정체된 가운데 재정적자 누적으로 정부채무가 과도하게 늘어나면서 2011년 이후 재정위기 가능성이 부각됨. 2011년 11월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퇴진하고 몬티 내각이 출범한 이후 재정건전화 및 성장 회복을 위한 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2013년 2월 총선 결과 상하 양원을 장악한 정당이 없어 정부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으며, 나폴리타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13년 5월 15일 이후 신임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총선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됨.
- 이탈리아는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EEC(유럽경제공동체) 창립멤버이며, 1999년 EMU(경제통화동맹)에 가입함.

## II. 경제동향

### 1. 경제 구조 및 정책

#### 가. 구조적 취약성

##### □ 정부채무 규모가 GDP의 127%에 달해 경제 운용의 장애요인으로 부각

- 이탈리아 정부채무는 2012년 말 기준 GDP 대비 127%(약 2조 유로)에 달하여 EU 내에서 그리스 다음으로 높은 수준임.
  - 이탈리아는 사회보장제도 및 재분배정책이 적절한 세제 개편 없이 시행되면서 정부채무가 꾸준히 증가하여 1994년 GDP 대비 정부채무 비중이 121%를 기록했으며, 1999년 EMU에 가입한 이후 꾸준히 재정 긴축을 추진하면서 2007년에는 정부채무비율이 103%까지 개선됨.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이 늘어나면서 2012년 말 정부채무비율은 127%까지 상승함.
  - \* EMU 가입조건(유로화 도입조건) : 재정적자가 명목 GDP의 3% 이내, 정부채무 잔액이 명목 GDP의 60% 이내
  - 과중한 정부채무 규모를 감축하기 위해 지속된 저성장 및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재정긴축을 지속하는 등 정부의 경제 운용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과도한 정부채무 문제는 단기간 내 개선이 어려워 외부 불안요인이 부각될 경우 경제위기가 전이될 위험이 있음.
  - 2012년 이탈리아의 정부채무에 대한 이자지급액은 GDP 대비 5.5% 규모로, 기초재정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이자지급비용이 과다해 재정적자가 누적되면서 정부채무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음.
  - GDP 대비 정부채무 추이: 115.9%(2009)→118.7%(2010)→120.1%(2011)→127.1%(2012)

## □ 금융부문의 유동성 부족현상이 지속되어 은행 부실화 우려

- 이탈리아 은행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로존 재정위기를 거치며 경기침체 지속에 따라 기업대출 등 부실채권 증가 등으로 유동성 부족과 수익성 악화 현상을 겪고 있음. 이에 따라 이탈리아 은행들은 2012년 6월 2,810억 유로를 지원받는 등 ECB의 유동성 지원에 의존하고 있음.
- 2013년 3월 1일, 이탈리아 3위 은행인 몬테 파시 은행이 유럽 금융당국이 정한 자본금 기준을 맞추기 위해 이탈리아 정부로부터 40.7억 유로의 구제 금융을 지원받음.
- 2013년 3월 IMF는 이탈리아 은행들에 대한 예비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전체 금융시스템이 계속되는 저성장 시나리오와 집중적 충격에도 잘 버틸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난다고 밝힘. 그러나 실물경제의 지속적인 약세, 국가신인도와 금융 분야의 관련성을 고려할 때 이탈리아 금융시스템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함.

## □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고 있으나, 아직은 관리 가능한 수준

- 이탈리아는 1997~98년에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으나 1999년 유로화 도입 등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크게 축소되었고 2000년 이후 매년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720억 달러(GDP의 -3.5%)와 719억 달러(-3.3%) 수준의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2012년에는 경기침체로 인해 수입이 감소하면서 경상수지 적자가 119억 달러(GDP의 -0.6%)로 축소되었음.

## □ 유럽 경제권에 편중된 무역구조

- 이탈리아는 유럽 경제권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아 EU 회원국의 경제 상황 변화에 민감한 구조적 취약성을 지니고 있음. 2011년 기준 EU 27개국이 이탈리아의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6.0%,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3.3%인 것으로 나타남.
- \* 주요 수출대상국('11): 독일(13.3%), 프랑스(11.8%), 미국(5.9%), 스페인(5.4%), 스위스(5.4%)
- \* 주요 수입대상국('11): 독일(16.5%), 프랑스(8.9%), 중국(7.7%), 네덜란드(5.5%), 스페인(4.7%)

## 나. 성장 잠재력

### □ 만성적인 장기 저성장 구조가 경기회복의 최대 위협요인으로 작용

- 2012년 이탈리아의 1인당 GDP는 33,000 달러, GDP 규모는 약 2조 달러로 유로존 3위의 경제규모를 갖추고 있으나 만성적인 장기 저성장 구조를 형성하고 있어 경제가 구조적으로 취약한 상황임.
- 2003~12년 평균 경제성장률은 0%로, EU 평균 1.3%, 프랑스 1.0%, 스페인 1.4%에 비해 낮은 수준
-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며, 기업이 가족형 중소기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부가가치 창출에 한계가 있음. 또 주력 산업인 섬유, 가구산업 및 관광산업이 모두 경기에 민감한 특성이 있음.
- 2011년 3분기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는 등 소비 및 투자 위축으로 경기가 급격히 하강하고 있는 추세임.
- 경제성장률: 1.8%(2010) → 0.5%(2011) → -2.4%(2012)

## □ 외국인직접투자는 M&A 시장을 중심으로 회복세

- 몬티 내각은 경기부양을 위해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위기를 이용한 기업 인수합병이 활발해 이탈리아로의 FDI 유입액은 양호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2007년 400억 달러 수준이었던 FDI 유입액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8년에는 95억 달러가 유출되었으나, 이후 회복세를 보여 2010년 96억 달러, 2011년 326억 달러에 이어 2012년에는 310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12년 7월 카타르 왕실이 이탈리아의 명품 브랜드인 발렌티노와 미소니를 7억 유로에 매입하는 등 M&A 시장에서의 FDI 유입이 활발함.

## □ 기업경영여건 평가순위, 중위권 기록

- 국제금융공사(IFC)가 발표하는 기업경영여건평가(Doing Business Rating)에서 이탈리아는 2012년 75/185위, 2013년 73/185위로 평가되어 기업경영여건이 중위권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남.
- 분야별로는 세금 납부, 계약 실행 등의 평가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다. 정책성과

### □ 강력한 재정긴축안 도입 및 시행

- 이탈리아 정부는 2011년 11월 몬티 총리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재정개혁을 추진해왔으며, 2012년 7월 5일에는 2012년 중반부터 2014년 말까지 공공지출을 총 260억 유로 감축하기로 합의함. 이로 인해 경제성장은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2012년 -2.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데 이어 2013년에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이탈리아 정부가 제시한 재정건전화 계획은 2015년 균형재정수지 및 GDP 대비 정부채무 비중 114.4% 달성을 목표로 함.

- 2012년 GDP대비 재정적자는 전년 대비 0.9%p 축소된 -3%를 기록했으며 연금개혁, 재산세 인상 등의 조치에 힘입어 2013년에는 -2.5%까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 □ 성장 회복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 추진

- 2012년 6월 27일 이탈리아 의회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및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하는 노동시장 개혁안(포르네로 법)을 의결함.
  -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해고요건을 완화시키고, 수습직원의 30% 이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최대 3년까지 임금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청년노동자 고용을 장려하는 내용이 포함됨.
- 2012년 7월 중순에는 서비스업, 특히 전문직에 대한 시장개방 강화 등의 법안을 의결함에 따라 전문 서비스 분야의 경우 최소수수료를 폐지하고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등 경쟁을 유도

#### □ 경기부양 위해 민간 부문에 대한 정부 채무 조기변제 승인

- 2013년 4월, 이탈리아 내각은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의 민간 부문에 대한 400억 유로 상당의 채무를 조기에 변제하는 긴급 명령을 승인함.
  - 정부가 민간 부문에 대한 부채를 조기 상환함으로써 금융위기로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기 어려워진 이탈리아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몬티 총리는 해당 조치로 인해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EU 기준인 3%를 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함.

### Ⅲ. 정치 · 사회동향

#### 1. 정치안정

□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 2011년 11월 초 사임, 경제학자 출신의 마리오 몬티 총리 취임

- 2008년 4월 총선에서 베를루스코니가 이끄는 중도우파연합이 상원 315석 중 174석, 하원 630석 중 344석 등 과반 의석을 차지하며 승리함.
- 민주당 주도의 중도좌파연합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세금인상 실시 등으로 중산층과 서민층의 반발을 일으켜 총선에서 패배한 것으로 분석됨.
-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2011년 11월 초 재정위기 악화로 인해 사임하고, EU 집행위원 출신의 경제학자인 마리오 몬티 총리가 거국내각을 구성함.

□ 경제침체 및 긴축정책으로 정부에 대한 지지율 하락

- 몬티 총리는 강력한 재정긴축 및 개혁 정책을 추진했지만 지속된 긴축정책과 높은 실업률로 인해 정치적, 사회적 불만이 고조되며 지지율이 하락함.
- 여론조사기관인 SWG의 조사 결과, 몬티 총리에 대한 지지율은 2011년 11월 71%였으나 2012년 12월에는 38%를 기록하였으며 2012년 12월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2013년 2월 총선에 몬티 총리의 출마를 반대한다는 응답 비중이 61%에 달하는 등 증세 및 지출 삭감에 대한 강한 반발로 지지율이 하락함.

□ 2013년 2월 총선 후 정부 구성 실패로 정국 불안 지속

- 2013년 2월 24~25일 실시된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끄는 중도좌파연합은 29.54%를 득표해 29.18%를 득표한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의 자유국민당을 제치고 제1당이 됨. 코미디언 출신 베페 그릴로의 오성운동이 득표율 25.55%로 3위, 마리오 몬티 총리의 시민선택당은 10.56% 득표에 그치며 4위를 기록함.



- 전국 단위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는 하원에선 제1당이 전체 630개 의석 가운데 55%를 차지하도록 되어 있어 득표율 차이는 근소하지만 민주당이 하원 과반의석을 차지함.
- 주 단위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는 상원에서는 전체 315석 중에서 자유국민당이 가장 많은 116석, 민주당이 113석, 오성운동이 54석, 시민선택당이 18석을 차지함.
- 강도 높은 긴축정책과 경기침체가 지속된 데 따른 유권자의 반감으로 인해 선심성 공약을 내세운 자유국민당과 오성운동이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반면, 몬티 총리의 시민선택당은 부진한 결과를 얻은 것으로 분석됨.
- 자유국민당은 탈세자 사면, 재산세 폐지 및 환급(약 40억 유로)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오성운동은 근로시간 주20시간 단축, 긴축재정 거부, 유로존 탈퇴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였음.
- 총선 결과 양원을 모두 장악한 정당이 없어 하원 의석 과반수를 차지한 민주당이 다른 당과 연합하여 상원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해야 정부 구성이 가능하나, 노선 차이 등으로 연정이 구성되지 못해 의회해산 및 조기총선 실시가 예상됨.
- 민주당은 정책노선 차이가 큰 자유국민당과는 연정을 구성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으며 오성운동은 기존 정당과의 연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시민선택당과는 연합해도 과반 의석 확보가 불가능하여 정부 구성이 어려운 상황임.
- 3월 22일, 나폴리타노 대통령은 민주당의 베르사니 당수에게 연정 구성을 위한 권한을 일임하였으나 3월 29일 베르사니 당수는 연립정부 구성 협상이 실패했다고 보고함.
- 정부가 구성되지 못해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할 것으로 전망되나, 임기가 6개월 미만 남은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할 수 없으므로 나폴리타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5월 15일까지는 현재의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 □ 조기총선을 실시하더라도 정부 구성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

-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과 자유국민당에 대한 지지율이 근소한 차이로 나타나 차기 총선에서도 특정 정당이 상하원 모두에서 최다 의석을 차지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돼 정부 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몬티 총리의 개혁정책이 계속 시행될지 여부가 불확실함.
- 2013년 4월 12일 SWG가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현재 제2당인 자유국민당이 32.4%의 지지율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제1당인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은 30%로 나타남.

##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 긴축정책에 반대하는 시위 빈발

- 이탈리아 정부가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추진 중인 긴축정책 및 노동 개혁안에 반발해 반정부시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회불안정이 초래됨.
- 2012년 12월 12일 이탈리아 노동계는 정부의 재정긴축안에 항의하는 총 파업을 실시하였으며, 12월 19일에는 공공부문 노조가 재정긴축 반대 시위를 벌임.
- 2012년 하반기 중 포르네로법에 따라 기업체들이 경영난을 이유로 정리 해고를 실시하자, 3대 노조와 산하의 산별 노조가 일제히 기업들이 경제적 이유 없이 노동자들을 자의적으로 해고했다고 비난하며 해고 노동자의 복직과 포르네로법의 폐기를 요구함.

###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의 갈등 상존

- 몬티 총리는 시칠리아 등 이탈리아 지방정부의 재정부실이 심화되면서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행정구역을 110개에서 43개로 통폐합하는 안을 검토한다고 밝힘.
- 2012년 7월 24일에는 지방도시 시장들이 중앙정부의 지역보조금 삭감 등 긴축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임.

- 이탈리아 북부지역은 공업화 등으로 발전되어 있는 데 반해, 남부지역은 농업 중심적이며 낮은 소득수준, 높은 실업률 등으로 인해 복지의존도가 높음.

#### □ 실업률 상승으로 사회불안 초래

- 이탈리아의 실업률은 2008년 이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상승하여 2011년 9.5%, 2012년 11.2%를 기록하였으며 2013년 1월에는 역대 최고치인 11.7%, 2월에는 11.6%를 기록하였음. 특히 청년실업률은 37.8%를 기록하며 2012년 2월 대비 3.9%p 상승하는 등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고 있음(이탈리아 통계청).

\* 실업률: 8.4%(2009) → 8.2%(2010) → 9.5%(2011) → 11.2%(2012) → 11.6%(2013. 2월)

### 3. 국제관계

#### □ EU 회원국과의 원만한 관계유지에 역점을 두는 대외정책 표방

- 이탈리아 정부는 유로존 재정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독일 등 EU 회원국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유로존의 결속을 다지고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는 데 역점을 두고 있음.

#### □ 미국과의 양호한 외교관계 유지

- 이탈리아는 NATO 회원국으로 아프가니스탄 평화유지군 파병, 이란의 핵 보유 반대 등 미국의 정책에 동조하고 있음.

## IV. 국제신인도

### 1. 외채상환태도

- 2012년 7월 몬티 총리가 구제금융 요청 가능성을 시사하였으나, 이후 별다른 움직임은 보이지 않음
  - 2012년 7월 10일, 몬티 총리가 '구제금융이 절대로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언급해 처음으로 구제금융 요청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국제금융시장이 동요함.
  - 이탈리아는 2012년 기준 유로존 전체 GDP의 16.5%를 차지하는 제3의 경제대국으로서 이탈리아가 구제금융을 요청할 경우 그 규모와 파급효과는 유로존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됨.

### 2. 국제시장평가

- 주요 신용평가기관, 2011년 이후 이탈리아 정부채권 신용등급 지속 강등
  - S&P는 2012년 1월 13일 외부 자금조달 상황 악화 등을 이유로 이탈리아 정부채권 신용등급을 A에서 BBB+로 강등함.
  - Moody's는 2012년 7월 12일 국채수익률 상승 등을 이유로 이탈리아의 정부채권 신용등급을 A3에서 Baa2로 강등하고 등급전망은 부정적으로 유지함.
  - Fitch는 2012년 1월 27일 이탈리아의 정부채권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2013년 3월 8일 총선 결과에 따른 정국불안 및 경기 침체 지속을 이유로 BBB+로 추가 하향 조정하고 등급전망을 부정적으로 유지함.



###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 수립: 1956년 11월 24일(북한과는 2000년 1월 4일 수교)

○ 양국 간 수교 역사는 긴 편이며, 문화, 과학기술 등 다양한 방면의 협력 관계가 구축되어 있음.

\* 한국-이탈리아 주요 협정체결 현황

: 무역, 문화협정(1965), 사증면제협정(1975), 경제협력협정(1982), 과학기술 협력협정(1984), 이중과세방지, 투자보장협정(1989), 관광협력, 사회보장 협정(2000), 면허상호인정교환각서(2002)

□ 2012년 대 이탈리아와 교역규모 소폭 감소

○ 글로벌 금융위기 및 유럽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 대 이탈리아 교역규모는 전년(77억 달러) 대비 18% 감소한 63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2010년 73억 달러, 2011년 85억 달러로 증가하였음. 2012년에는 수출 감소에 따라 교역규모가 소폭 감소하여 81억 달러를 기록함.

○ 이탈리아는 우리나라의 30위 수출상대국이며 26위 수입상대국(2012년 기준)

- 우리나라의 대 이탈리아 수출실적 36억 달러(2010) → 41억 달러(2011) → 33억 달러(2012)

□ 대 이탈리아 직접투자 실적(2012년 말 기준): 84건, 4억 달러(누계 기준)

○ 우리나라의 대 이탈리아 연중 직접투자 실적은 2008년 6,030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2010년 355만 달러로 급감하였다가 2011년 510만 달러, 2012년 1,277만 달러로 증가하였음.

- 우리나라의 대 이탈리아 직접투자 주요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제조업,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등

<표 2>

한·이탈리아 교역 규모

단위: 천달러

	2010	2011	2012	주요품목
수 출	3,569,135	4,107,495	3,261,663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철강관, 자동차
수 입	3,723,304	4,373,924	4,828,203	가방, 의류, 농약 및 의약품, 원동기 및 펌프

## V. 종합 의견

- 이탈리아는 1인당 GDP가 33,000달러 수준으로 고소득국이나, 최근 10년간 평균 0%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GDP 대비 정부채무 비율이 127%에 달하는 등 경제가 구조적으로 취약한 상황임. 몬티 총리 취임 이후 강력한 재정긴축 및 경제구조 개혁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재정건전성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나,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긴축정책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높아 긴축반대 시위가 빈발하는 등 사회적 안정성이 악화되고 있음.
- 2013년 2월 총선 결과 재정긴축에 반대하는 자유국민당과 찬성하는 민주당이 각기 상원과 하원의 최다의석을 차지하였으며, 연립정부가 구성되지 못하고 정국 불안이 이어지고 있음. 총선 결과가 나오자 국제금융시장에서 이탈리아 정부채권 금리가 급등하고 Fitch가 이탈리아의 정부채권 신용등급을 한 단계 하향 조정하는 등 정치적 불안정성이 국제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향후 집권할 내각이 재정건전화 및 경제구조 개혁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할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임.
- 이탈리아는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채무를 감축하는 동시에 경제성장 달성과 고용 증대를 도모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정부채무 부담 및 만기 저성장 기조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됨.

조사역 이주은 (☎02-3779-5712)

E-mail: june@koreaexim.go.kr